

대구시의회, 지방채발행 '일단 스톱'

사업우선 순위·봉무산업단지 조성 불투명성 등 효율성 지적

대구시의회는 12일 대구시의 지방채 발행(390억원)에 대해 일단 제동을 걸었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도재준)는 "의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내일(13일)집행부의 소명을 듣고 결정(지방채 발행 승인여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SOC 사업 투자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4년만이며, 내역은 봉무산업단지 남단(금호강변)도로 보상비 250억원과 도동 IC진입로 주변 107필지 보상비 140억원 등이다.

이날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 자체에

는 반대하지 않으면도 사업 우선 순위와 봉무산업단지 조성 사업 불투명성을 우려하면서 지방채 발행의 효율성을 지적했다.

최문찬의원은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기채 390억원을 발행해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돼야 하나 토지보상비로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서 지방채 발행 목적의 타당성을 따졌다.

최의원은 대구시가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를 하려면 돈(지방채를 발행해)이 돌아야 하는데 보상비로 쓰이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며 경제활성화에 회의적인 반

응을 보였다.

그는 "성서공단을 통과하는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출퇴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월성지구의 경우 내년에 15만명이 입주함에도 도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투자우선 순위를 추궁했다.

이경호의원은 "기채를 발행해 봉무단지 도로보상비로 쓴다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교통혼잡량을 미리 예측해 보상 하는 것으로, 다른 시급한 현안 사업에 비해 투자 우선 순위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